

구제역 확산에 쇠고기·돼지고기 소비 위축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내륙 지방으로 퍼진 것이 대형마트의 육류 매출에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충주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된 후인 지난 23~25일 이마트의 쇠고기 매출은 2주 전의 같은 기간보다 4.2%, 돼지고기 매출은 5.1% 줄었다.

롯데마트에서도 같은 기간에 돼지고기 매출은 11.9%, 쇠고기 매출은 7.7% 하락했다. 지난 15일부터 축산물 할인 행사를 하는 홈플러스에서는 이 기간의 쇠고기 매출이 1주 전인 16~18일에 비해 2.0% 감소했다. 반면 대체 상품인 닭고기 수요는 늘고 있다. 지난 23~25일 롯데마트의 닭고기 매출은 2주 전과 비교할 때 8.5% 증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 쇠고기와 돼지고기 매출이 준 것은 구제역이 내륙에서도 발견됐다는 뉴스의 영향을 받아 고기류 소비를 자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지만 구제역이 일단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에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농협, 특별방역비 15억원 추가 긴급지원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의 가축질병 국가위기경보 최상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대응체계 구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앙본부와 계통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구제역 대책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전체 조직 역량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이에 따라 중앙본부에 남성우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대책본부장으로, 담당사무를 상황실장으로 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으며, 각 지역본부와 조합, 축산사업장에서 사무소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농협중앙회는 특히 이미 지원한 6억원 이외에 소독약품 지원 등에 15억원의 특별예산을 편성, 일선에 지원하

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축협에 방역복 1만5천벌과 소독약 1만3천개, 생석회 2만5천포를 보급했다.

또 일선축협이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 180대를 이용해 전국 단위 광역 방제 활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펼친다.

구제역 공포 확산...방역시스템 '문제 있다'

구제역이 내륙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 현장에서는 인력부족 등으로 차량방제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부실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인천 강화에 이어 김포, 충북 충주까지 구제역이 확산되자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경로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쉽지 않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역학조사 과정에 현장 임상수의사들을 참여시켜 조사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임상수의사들이 정부 조사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역학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를 했지만 이번 구제역에는 이러한 활동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장의 농가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임상수의사들이고 농가들도 관 보다는 수의사들에게 농장상황을 털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구조가 없다 보니 현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역학조사 결과를 내 농가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해당 축주가 가축 중개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의 확산방지와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이 농장에 침투했을 개연성도 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의 한 임상수의사는 "현장과 정부의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과거에는 같이 현장도 보고 실제적으로 역학조사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모습이 미진한 것 같다"며 "바이러스가 이미 퍼져 있을 수 있는데 현장의 수의사들에게 협조를 구해 의견을 들어보고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장 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구제역 확산을 막는 방안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포천의 경우 임상수의사가 확산의 매개체로 지목되면서 수의사들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임상수의사는 "최초 발생시 수의사가 마치 바이러스를 옮긴 것처럼 나와서 명에도 많이 손상됐고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괜히 신고했다라는 분위기다"며 "방역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고활동에 더욱 적극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지난 4월 21일 시·도 부지사 회의를 열어 철저한 방역활동을 주문했음에도 현장에서 방역활동이나 차량소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다.

김포지역 구제역 발생따라 살처분 불가피

200ml우유 72만3천개를 생산한 '슈퍼젯소'가 더 이상 우유를 생산할 수 없게 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포지역 구제역 사태로 인해 현웅목장(대표 차진숙)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쩔수 없이 생애총유량 14만4천771kg을 기록 중인 '현웅 33호'(사진)도 살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현웅 33호'의 기록행진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당초 농협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역대 국내 최고기록인 연산목장의 14만9천446kg을 무난히 넘어서 15만kg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특히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 국내 최고의 젖소가 살처분 조치됨에 따라 해당 농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됐다.

현웅목장의 경우 이 젖소 뿐만 아니라 이미 도태된 어미소 역시 9산을 했으며 현재 착유 중인 딸 소들 역시 9산과 6산 등으로 산차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애 유량도 각각 9만kg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개량 성과를 기록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 개량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사라지게돼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올해 구제역 예산은 0원?

구제역 확산으로 살처분 가축이 늘면서 정부의 재정 소요는 늘고 있지만 정작 구제역 관련 예산은 올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본질적으로 구제역 같은 전염병은 매년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 8일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해 충북 충주시까지 확산된 구제역의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금까지 약 5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1월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때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 104억원까지 합치면 모두 62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특회계)의 살처분 보상금 500억원을 끌어다 이 돈을 지급했지만 실제 이 돈은 구제역 보상용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다.

브루셀라병, 결핵 등 평상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살 처분된 소 돼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된 것이다. 또 구제역이 발생하면 시도 가축방역, 가축질병 근절 자금, 축산물 수급안정 자금, 생계안정자금 등도 지급되지만 이들도 일반적인 가축질병 전체를 위해 편성된 자금이다. 이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처럼 발생이 불규칙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가축질병, 자연재해에 대한 예산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구제역처럼 한 번 터지면 대규모 자금 소요가 생기지만 발생이 불규칙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가축질병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산은 통상 예비비를 끌어다 쓴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나 AI는 한 번 터지면 급속도로 번져 대규모 자금 소요가 생기지만 예측할 수 없고 몇 년씩 발생하지 않기도 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구제역이 유달리 기승을 부리면서 농특회계의 살처분 보상금 500억원이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농식품부는 예산 당국과 추가적인 예비비 사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구제역, '지방 축제'로 '사람 전파' 우려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축제가 이어져 도 방역당국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제역이 사람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우려, 이미 준비가 끝난 축제와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쉽게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3일 도에 따르면 이날과 24일 광주와 이천, 여주에서 잇따라 대규모 도자기축제가 개막돼 다음달 9일과 16일까지 계속된다.

또 이날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다음달인 5월말 9일까지 계속되는 한국고양꽃전시회가 개막됐다. 다음달 5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25만여명

이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월 30일에는 안산에서 30만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국제항공전이 6일간 일정으로 시작된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에는 하남에서 마스터스 챔피언십 마라톤대회가, 같은날 과천에서는 2010 과천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이밖에 오는 5월 1~5일에는 의왕 왕송호수 인근 자연학습공원과 철도박물관에서 어린이축제가, 같은 달 5일에는 광명시에서 자전거 한마당축제가, 같은 달 15~16일에는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한강 유채꽃축제가 펼쳐진다.

도 방역당국은 전국 곳곳에서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이같은 대규모 축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에 의한 급속한 구제역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각 행사를 취소나 축소, 연기하도록 요구도 할 수 없어 가슴 아이를 하고 있다.

아직 행사장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특히 여주, 이천, 광주의 도자기 축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다 국제항공전의 경우 1년간 준비한 국제행사로 이미 외국에서 참가자와 전시물품 등이 도착했거나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도 방역당국은 축산농가 관계자들의 경우 가급적 이같은 행사장을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축제 현장을 방문한 이웃들의 농장방문도 차단하도록 했으며, 축산농가가 많고 구제역이 발생한 충주와 인접한 여주, 이천, 광주 등을 중심으로 각 시·군에도 가급적 행사를 축소하거나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도 축산방역 담당자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기온 섭씨 18도 내외, 습도 60~65%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해진다"며 "지금 이 시기에 해당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축제가 이어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제역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가축이 외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 만큼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준원유량 거래價 하락세

낙농진흥회의 기준원유량 거래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28% 하락한 20~25만원대를 기록하는 등 원유 쿼터값에 대한 낙농가들의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인도농가수와 거래가격 변동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4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기준원유량 거래가격이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서는 20만원대 중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준원유량 거래가격의 하락은 낙농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폐업농가가 갈수록 늘면서 공급은 늘지만 수요자가 별로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충남의 한 농가는 “규모화를 이유로 기준원유량 구매를 원하는 농가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규모화가 거의 끝나 기준원유량 거래 자체가 많이 없다”며 “반면에 낙농 1세대들이 노령화되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낙농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면서 낙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나 기준원유량의 공급은 수요보다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월 기준 8,260농가였던 낙농가는 2009년 9월 기준 6,763농가로 18%가량 급감하는 등 폐업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외 한 관계자는 “기준원유량 거래가격이 떨어지면서 기존의 농가들 중에도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당분간 기준원유량 거래가격 하락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축산부문 6개 품목 대표조직구성 ‘급물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품목별 대표조직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 부문 6개 대표조직 설립 계획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5일 경기도 수원소재 농업연수원에서 ‘농축수산물 28개 품목 대표조직 기능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표조직 기능 활성화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자조금이 조성되지 않은 품목과 구성원 합의가 필요한 일부품목을 제외한 전품목 사업기능을 대표조직에 이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의 경우 우유를 제외한 한우, 돼지, 양봉, 계란, 오리는 연내 자조금 사업 시행권을 대표조직에 이관할 계획이다. 5개 축산물은 자조금관리위원회가 대표조직으로 전환되며 우유만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가 중앙낙농위원회로 확대개편돼 대표조직으로 전환된다.

품목별로 한우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조금사업 및 대표조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수급 조절, 가격안정, 농가교육, 기술개발지원, 연구회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돼지는 대표조직을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로 지정하고 대표조직 결정사항에 대해 실행조직별로 임무 및 역할을 부여한다. 생산 부문(교육·컨설팅 지원)은 대한양돈협회가 담당하고 유통부문(판매지원)은 농협중앙회, 수출부문중 R&D분야는 돼지고기 수출사업단이 담당하고 수출촉진마케팅지원은 양돈수급안정위원회와 수출촉진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양봉도 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조금사업 및 대표조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생산부문은 한국양봉협회가, 유통부문은 농협중앙회(선유꿀 브랜드)가 담당하고 R&D 분야(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등)는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에서 맡는다. 계란은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조금사업 및 대표조직 업무를 총괄하고 오리도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조금사업 및 대표조직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우유는 낙농진흥회가 중앙낙농위원회로 확대개편되면서 전국적인 원유수급조절업무를 수행케 된다. 이에 따라 우유의 대표조직 이양시기는 중앙낙농위원회가 설립된 2011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농식품부측은 밝혔다.

왕겨 가격 폭등·품귀현상, 축산농가 '비상'

축산농가들이 왕겨를 구하지 못해 울상이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도정물량 역시 감소, 최근 왕겨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라는 것이 축산농가들의 하소연이다.

전남지역의 한 오리농가는 "지난해 5톤 차로 45만원 가량 했던 왕겨가 지금은 70~80만원에도 못 구한다"며 "오리의 특성상 매일 왕겨를 깔짚으로 깔아줘야 하는데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오리농가 역시 "선입금을 쥐도 왕겨를 구하기가 힘들다"며 "약속을 하고 신고 오다가도 다른 곳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해 못 사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1만마리의 육용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1회전(42일)에 사용하는 왕겨는 약 13톤이다. 지난해에 비해 왕겨가격이 1.5배가량 올라 농가는 1회전마다 약 9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이마저도 구하기 힘든 농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깔짚이 부족할 경우 축사 바닥에 습기가 많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최근 오리소비가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왕겨부족사태는 자칫 수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농가에서는 왕겨대신 톱밥을 사용하고 있지만 톱밥 가격도 덩달아 올라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지역의 한 한우농가는 "톱밥도 왕겨도 원하는 만큼 구입하기가 힘들다"며 "올해는 1월부터 날씨가 굵은 날이 많아 톱밥이나 왕겨를 대신할 대체재를 깔아도 봤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충남지역의 육계농가도 "병아리 입식을 해야 하는데 깔짚으로 사용할 왕겨와 톱밥을 못 구해 입식을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농가의 깔짚 수급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낙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율"

낙농가들이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낙농가들이 지난 2008년에 대출받은 특별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주문했다. 낙농가들의 경영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대로 대출상환을 시작하게 된다면 많은 농가들의 부채는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 연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낙농육우협회는 "2006년 말부터 폭등한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해 여러 차례 인하됐으나 아직도 35% 인상된 수준"이라며 "사료구매자금 상환이 도래한다면 많은 농가들이 자금 상환을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일반대출로 돌릴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어려운 농가는 소를 팔아 상환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낙농기초조사 연구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낙농가들이 전체 농가의 절반이 될 정도로 낙농가 부채상황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업은 타축종에 비해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도 많다"며 "송아지 구입에서 소득창출이 가능한 시간이 최소 28개월이 소요되는데 이제 겨우 사료가격 몇 번 인하됐다고 2008년도에 대출받은 원금상환이 가능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이아말로 농식품부가 말하는 소위 현장농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08년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08년 1조5000억원, 2009년 1조원을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㉞

(출처 : 축산신문, 농축산신문,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등)